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309
----------	-------

발의연월일 : 2025. 5. 1.

발 의 자 : 권칠승·박 정·서미화
문금주·전진숙·송옥주
민병덕·윤종균·한민수
허성무·김준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위탁거래에 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분쟁 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를 하고, 위법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개선 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의 제척기간이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수탁·위탁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탁·위탁거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실태조사를 개시한 날 또는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

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제척기간)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수탁·위탁거래(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수탁·위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 요청을 받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용 검토를 위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

면 제28조제3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 요구 또는 시정명령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등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7조 제1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개시한 조사에 대한 개선 요구 또는 시정명령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27조의2(제척기간)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수탁·위탁거래(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수탁·위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u></p> <p><u>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u></p>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 요청을 받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용 검토를 위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제28조 제3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 요구 또는 시정명령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